사람 살리는 정부가 연 예방중심 안전시대



기 고
이 용 석
노무사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현장의 관심이 뜨겁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한층 넓어졌고, 현장의 안전 파수꾼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대폭 정비된 것이다. 현장에선 안전 패러다임이 '사후 대피'에서 '주체적·선제적 예방'으로 대전환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개정법 대응으로 인한 혼란이 공존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된점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주 의견청취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대상 규모 규정 및 추천 인원 제한 규정도 삭제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추천인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항(제23조 제3항)이 신설돼 사측의 안전관리자 외에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감독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확대다. 작업중지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법 개정의 핵심은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 확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범위 확대,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구제신청 제도 신설이다.

작업중지권이란, 현장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과거와 달리 작업중지권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핵심적인 권리다.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단계'까지 작업중지권 행사가 허용돼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넓어졌으며, 나아가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첫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가 보고하면 관리감독자는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지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둘째, 정당한 작업 중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위원회에 곧바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제52조 제5항 신설)이 열렸다.

현장 노동자 개개인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단독으로 행사 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정법의 진정한 의의가 드러난다. 현장의 노동자 대표성을 갖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주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작업 중지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탄탄해진 것이다.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사문화된 작업중지권 및 수동적 대피에서 벗어나,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작업중지권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이번 산안법 개정이 일터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현장에서 굳건히 뒷받침하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 공인노무사

지역주민 설득 빠진 'AI 데이터센터' 속도전



기자 수첩
조 민 선
〈IT부〉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정부 인사와 산업계가 모인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AI 데이터센터(AIDC)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될 만큼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이 됐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줄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내년 3월 시행된다.

그런데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역 곳곳에서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중앙 정부가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냉각시설의 24시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열기, 고압 송전설비로 인한 경관 훼손,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AIDC의 고압전선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1% 내외 수준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수치만으로는 불만을 해소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비슷한 이유로 AIDC 건립 도중에 중단한 사례가 있다. 미국 데이터센터 심장부로 알려진 버지니아주에서 빅테크 기업이 추진하는 수십 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줄줄이 백지화됐다.

구글은 최근 수자원 고갈 문제를 방치하고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각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행정 소송 중이다. 메타는 주민들이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시장 해임까지 거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건물 설계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물론 갈등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안양에 AIDC 건립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으나 특고압선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전자파가 10밀리가우스를 넘으면 차폐판을 보강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준공에 나설 수 있었다.

내년 3월 시행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도 주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댈 곳은 지자체의 행정 의지뿐이다. 아직까지도 "즉각 조례를 제정하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배경이다. 설득 과정이 가속 페달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지혜를 모을 때다.

/msjo@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9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결과를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60년생** 큰 금전거래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72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84년생** 진로문제로 갈등 있겠습니다.

소 **49년생** 모임을 참석하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61년생** 생각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73년생** 무리를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불가합니다. **85년생**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문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실속이 없습니다. **62년생** 허황된 재물에 투자마세요. **74년생** 남방에서 귀인이 돕겠습니다. **86년생** 사방에 욕심꾸러기와 도둑놈이 보입니다.

토끼 **51년생**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3년생** 북서쪽으로 곧장 가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75년생** 부부금슬이 좋아집니다. **87년생** 매사 대길한 운이니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세요.

용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소홀히 마세요. **76년생** 달도 차면 기울게 됩니다. **88년생** 평생 배필을 만날 수 있으니 주도권을 잡고 나가세요.

뱀 **53년생** 형제자매와 도모하는 일은 만사 대길합니다. **65년생** 문서관계를 조심하세요. **77년생** 귀하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89년생** 명예가 오르고 관록에서 빛이 나니 주변의 인정을 받겠습니다.

말 **54년생** 선은 길하나 후는 흉합니다. **66년생** 주변에 당신을 해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78년생** 쥐띠, 돼지띠 배우자를 둔 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90년생** 재물운은 좋고 이성관계 또한 발전합니다.

양 **55년생** 관재구설이 있으니 불필요한 시비나 다툼을 피하세요. **67년생** 주색잡기에 조심하세요. **79년생** 형제간의 우애에 힘쓰세요. **91년생** 유흥으로 인해 부모와의 마찰 있겠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매사 불길하니 자중하고 기도하세요. **68년생** 집안의 문단속을 확실히 하세요. **80년생** 부인과의 문제에 친구나 형제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92년생** 좀도둑을 조심하세요.

닭 **57년생** 애인과 다툼 수 있겠습니다. **69년생**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입니다. **81년생** 아랫사람에게 양보하면 길합니다. **93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운이니 책임감을 갖고 임하세요.

개 **58년생** 자식이 효도하니 서운한 감정이 일시에 풀립니다. **70년생**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의식주가 넉넉해집니다. **94년생** 안풀리던 관제가 해결됩니다.

돼지 **59년생** 싸웠던 친구와 화해합니다. **71년생** 하늘이 복을 내리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83년생**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95년생** 북방은 흉하며 헛된 힘을 쓰지 마세요.



김상회의 四季

헌법이라는 울타리

헌법불합치라는 말이다. 불합치라면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면 쉬운데 왜 불합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 헌법불합치를 알려면 헌법소원을 알아야 한다. 헌법소원도 뉴스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표현이다.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는 공권력이나 법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개인의 권리와 삶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인 것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법이나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또는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에 규정한 내용과 맞지 않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구제 수단인 셈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을 요청받은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대표적인 결정이 바로 헌법불합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때, 곧바로 그 법률을 무효로 만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세금 부과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당장 법을 없애버리면 세금 행정이 마비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다.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크니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해도 좋다는 것이다.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다. 헌법소원은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헌법불합치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자유와 권리가 사실은 수많은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3		6					7
		1	3					9
			9	7			5	
						9	6	2
		2				7		
8	7	5						
	9			6	2			
2					4	3		
4					9		2	6

		6	2				5	
9					6			
				3	4			1
	9	3		6				2
		1	3		8	4		
4				7		5	1	
3			6	4				
			8					9
	8				5	3		

6	2	3	5	1	9	4	8	7
7	4	6	3	2	8	9	1	5
5	8	1	7	4	6	9	2	3
3	1	5	2	7	4	6	9	8
4	9	7	8	5	2	1	3	6
2	6	8	1	9	3	7	5	4
9	7	2	4	6	5	3	8	1
8	5	4	9	3	1	2	7	6
1	3	9	6	8	7	5	4	2

1	3	6	2	8	9	7	5	4
9	2	4	7	5	3	6	1	8
8	5	7	6	1	4	9	3	2
6	4	9	5	3	8	2	7	1
2	1	8	9	4	7	3	6	5
3	7	5	1	6	2	8	4	9
4	8	3	4	9	6	1	2	7
5	9	2	8	7	1	4	9	6
7	6	1	3	2	5	8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8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